

열린뉴스

CONTENTS

- 1 혁신도시, 원칙과 절차에 충실해야
- 2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
- 3 공공기관 이전과 전북발전방향의 모색
- 4 스웨덴의 기술경영전략
- 5 전라북도 경기흥행지수 작성 의의와 전류경제
- 6 여성·중증원 자격인정 판결의 사회적 의미
- 7 상대배방지법 시행 1년, 변화와 과제
- 8 연구원소식

J E O N B U K D E V E L O P M E N T I N S T I T U T E

혁신도시, 원칙과 절차에 충실해야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발표와 함께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본격적인 입지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혁신주도형경제의 지역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입지선정에 대해서도 지역의 혁신을 견인할 거점지역으로 지방이전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적정점이 되어야 한다.

이제 도민적 관심은 자연스럽게 입지선정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어디에 건설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 어디에 어떻게 건설해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전북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앞서야 할 때다.

특히 전라북도의 장기발전비전 속에서 혁신도시는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해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전북의 공간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도민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지 등을 고려해 미래의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는 일차적 작업이어야 한다.

혁신도시는 그 자체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기보다는 지역발전의 작은 불씨에 불과하다. 그 불씨를 잘 살려 지역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는 일은 전북도민의 몫이다. 갈등이나 대립으로 에너지를 소진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접근을 통해 상생의 협력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혁신도시는 전북발전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혹자는 혁신도시를 맑은 물에 떨어뜨린 한 방울의 잉크로 비유한다.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혁신도시 건설로 그 파급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한 방울의 잉크로 비유되는 혁신도시가 전북의 미래를 파랗게 물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민적 지혜와 역량의 결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전문가집단과 이전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칙과 절차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혁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세계적 성공모델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확신한다.

행여라도 근시안적 이해에 매달려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거나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먼 훗날 세계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혁신도시로 주저없이 전북이 지목되기를 기대한다.

| 전북발전연구원장 한 영 주



전북발전연구원 열린뉴스
2005년 8월 통권 제3호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5년 8월 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http://www.jd.re.kr>
 TEL. (063) 276-2060
 FAX. (063) 276-2069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

정부는 지난 6월 24일 각 광역자치단체로 이전될 공공기관을 발표하고 최근 7월 27일에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한 구체적 지침인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침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이 혁신도시의 입지선정 기준과 혁신도시 입지선정 절차 그리고 행정사항으로 구분된다.

첫째,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해안, 산악 등 특수한 지역에 입지하여야 할 기관과 소음 발생 등으로 혁신도시에 입지하기 곤란한 기관 등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공공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이전을 인정토록 했다. 또한 광역시의 경우는 기 조성된 지역내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와 추가개발의 최소화를 위해 복수의 혁신지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도시의 입지는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내 형평성은 보완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였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구분	분야별		주요 내용
	항목	배점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20	• 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의 접근성 •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	20	•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용이성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 용이성
	기존도시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활용 가능성	10	• 기존 도시의 인프라 활용가능성 • 편익시설 활용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	15	• 산업단지, 택지 등 기개발지의 활용 가능성 • 관련법령에 의한 개발제한여부 등 토지 확보의 용이성 • 도로, 우수공급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 지가의 적정성 및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
	환경친화적입지 가능성	10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 개발 가능성 •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가능성
지역내 동반 성장 가능성	지역내 균형발전	10	• 지역내 균형발전 가능성
	혁신도시 성과 공유방안	10	• 기초지자체의 혁신도시 개발 이익과 성과 공유계획
	지자체의 지원	5	• 기초지자체의 지원계획
총 점		100	

둘째, 20명 이내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와 이전기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토록 하였다.

셋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방지대책을 주문하고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는 지침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구성해야 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은 2005년 9월 30일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완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지침안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예컨대 정부발표 이후 2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것과 두 달여 만에 광역자치단체별 혁신도시 최종후보지를 선정토록 한 점 등은 여러 방면의 어려움으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단편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2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정부의 구성안대로라면 단기간에 광역자치단체들은 전국적으로 220명의 이상의 국토 및 도시계획 전문가와 지역경제·산업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타 광역체에서 이미 위촉한 전문가를 스크린해가면서 위원을 탐색해 간다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닐 것이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입지선정 지침을 들여다보면 제각기 다른 목소리로 광역자치단체들이 주장해 왔던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대 원칙의 틀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고뇌가 역력한 지침이라고 감히 평가한다. 몇몇 광역자치단체의 특수성을 예외조항으로 인정한 점, 특히 예상되어왔던 바대로 지방으로 이전해 올 공공기관을 1개의 혁신도시로 집적화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수의 혁신지구를 건설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인프라 조성비용 등에 대해서는 1개의 혁신지구에 한하여 정부지원을 하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입지선정 지침 가운데 근본적 취지의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 조성유형별 규모를 확정해 놓은 것은 정부가 자치단체별 혁신도시의 장래 확장규모까지 고려해서 지원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의 규모를 설정해 놓음으로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최소의 근무 및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향후 혁신도시 범역으로 지구지정을 받는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둘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이전기관협의회 의견에 대변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전 기관내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활용은 불가능하다. 즉, 기관의 임직원의 참여는 불허된다. 당사자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평가의 오류 내지 직접적 책임기피 이유에서이다. 아울러 이전기관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에게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전국적 전문가에 대한 해석의 범위이다. 여기서 전국적이란 전국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를 지칭할 수도 있고, 동시에 지역적인 시각보다는 전 국토적 시각에서 혁신도시 입지점을 관망하는 시각을 보유한 전문가로 해석될 수 있겠다.

셋째, 세부시행사항으로 제시된 당해 시군구내에 혁신도시 대상후보지가 선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후보지 평가전에 혁신도시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공유할 계획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즉 중앙정부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성격 이면서 도내 시·군간 경합을 통해 최종 기초자치단체가 결정되는 사업의 경우 혁신도시 외 지역에 우선지원토록 한다든지 하는 이익과 성과의 공유계획을 의미한다. 이는 평가와 직접 연관된 혁신도시 입지 선정시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 환경·지역개발연구팀장 이창현

「공공기관 이전과 전북발전방향의 모색」

‘공공기관 이전을 전북발전의 기폭제로 삼아야’

본원은 지난 7월 7일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와 코아호텔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전북발전 방향의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명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건설’, 김영정 균형발전위원회전문위원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속대책: 전북의 과제와 대응’ 주제발표에 이어 본원 한영주 원장의 사회로 이양재 원광대 교수와 송해안 전주대 교수, 박종훈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태중 도민일보 정치부장, 김기환 토공신국토사업기획단장, 이경옥 전북도기획관리실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본문은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주제발표]

이명노(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역동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이전을 계기로 양질의 교육 및 주거여건을 구비한 도시건설을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상호연계해서 지역의 혁신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 개념이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도시, 평생학습도시, 친환경도시 건설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개발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기업도시와 연계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범도적 사고로 공공기관이전이 전북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한다.

김영정(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속대책 전북의 과제와 대응”

대단위 국가산업단지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형국책사업지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국토개발관리기능군의 전북지역이전은 국가 균형발전비전과 전략에 비춰 합목적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대규모 광역계획의 추진을 촉진하고 대학의 특성화 등과 연계해 광역형 RIS모델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농업중심지역으로서의 지역특성을 반영해 도내 식품이나 생물, 한방산업 육성 등과 연계해 생물건강과 생명산업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국토개발관리기능 및 응용농업부분을 반영한 지역혁신발전 5개년 사업의 수정전략이 필요하다. 시민참여모델인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우리시대의 거버넌스 협치체계 철학에 기초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토론]

이양재(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혁신도시’에 내재한 위험요소들의 최소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막대한 비용의 확보와 지역 내 마찰 등도 고려해야 한다. 김영정 교수의 지역혁신 전략 5개년사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하며 농업진흥청의 전북이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때이다.

송해안(전라북도지역혁신연구회 분과위원장) 농업을 제조업과 연계·발전시켜 준다면 이는 생물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물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보다 넓은 차원의 지역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북의 전략산업이 보다 분명해졌다. 전라북도의 발전을 이끌 중심도시로서 혁신도시가 건설되어 생활권, 경제권을 통합해서 지역경제를 하나로 끌고 갈 수 있는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관이전으로 인한 인구를 유인하여 지역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환경 구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박종훈(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공공기관 이전이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되기 위해 지방연합을 결성해야 한다. 혁신도시가 전라북도의 중심도시 기능강화를 통한 전북통합에 기여하도록 건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가동해서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입지선정을 해야 한다. 지가상승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김태중(전북도민일보 정치부장)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대처하고 전북이 혁신도시개발의 선도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세계적인 혁신도시 모델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김기환(한국토지공사 신국토사업기획단장) 공공기관은 집단이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지역발전계획, 전략산업 등 기타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 상호협력하면서 지방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뿐이므로 지방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

이경옥(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시·군간의 과열된 경쟁은 자제해야 한다. 지가 폭등을 막기 위해 모두 노력해서 건설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전 기관 종사자나 관련자들이 전북지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길 수 있도록 포용하는 도민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 정리 편집부

스웨덴의 기술경영전략

본원은 지난 7월 29일 박상철 교수를 초청하여 “스웨덴의 기술경영전략”을 주제로 제3차 콜로퀴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콜로퀴움에서 박상철 교수는 세계화시대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경쟁력의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문은 강연의 주요내용 요약이다. (편집자 주)



스웨덴은 에릭슨(정보통신), 볼보(자동차), 이케아(가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다수의 기업들을 보유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는 국가이다. 스웨덴이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은 기술혁신에 기반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GNP의 36%를 국제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찍부터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혁신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 정부의 노력은 1990년대 스웨덴의 연평균 연구개발 투자액이 GNP대비 3.45% 수준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스웨덴의 국가경쟁력은 OECD 국가들 가운데 3위에 이르고 있다.

스웨덴 정부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스웨덴의 국가혁신체계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통하여 구축되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독특하게 발전된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VINNOVA(혁신청)를 설치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 VINNOVA는 예산과 인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무중심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혁신체계의 분석,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등 산업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술혁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VINNOVA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정부 간 협력체계를 발전시키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01년 8개의 국가클러스터와 9개의 지역클러스터가 2005년에는 각각 18개와 14개로 증가하였다. 이들 클러스터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특성화된 혁신클러스터들(Innovative Clusters)로 첨단산업뿐 아니라 전통산업에서도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시스타과학연구단지(Kista Science Park)로 대표되는 스톡홀름(Stockholm)의 정보통신산업, 달라나(Dalarna)의 LCD산업, 노르보텐(Norrbotten)의 자동차시험산업, 스몰랜드(Smaland)의 가구산업 등 각 지역별로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산업클러스터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스웨덴의 발전된 산업클러스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핵심산업이 지역의 기존산업 또는 지역의 환경에 기초하여 전략적으로 선정되었다. 스몰랜드의 가구산업은 지역의 풍부한 임산자원을 활용하여 발전하였으며, 북

극권에 위치한 노르보텐의 자동차시험산업은 혹독한 자연환경을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산학협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스웨덴 정부는 대학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 속에서 이미 1970년대 중반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대학개혁을 수행하였다. 스웨덴의 대학은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토대로 지역산업과 긴밀한 연계를 이루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클러스터 조직이 매우 개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 클러스터에서는 회원제 형태의 각종 협의체들을 통하여 구성원들 간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협의체에는 클러스터 내부 구성원들뿐 아니라 외부 관련 기관이나 기업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허용됨으로써 지역적 고착성(lock-in effect)을 피하고 있다. 넷째, 클러스터의 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클러스터 엔진이 존재하고 있다. 클러스터 엔진은 클러스터의 발전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지속적으로 클러스터를 진단하는 등 클러스터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엔진으로는 시스타의 에릭슨, 스몰랜드의 이케아와 같은 기업이나, 달라나의 달라나기술대학과 같은 경쟁력 있는 대학, 노르보텐의 지방정부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초광역적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스웨덴의 산업클러스터는 지리적 범위가 반경 100km 이상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나의 클러스터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의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스웨덴에서는 자치단체들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경을 넘어 국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기도 한다.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산업정책의 수립, 광역적 관점에서 시·군 간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 및 산학연계 제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클러스터 엔진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지방정부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 추진은 산업발전에 중요한 요인들이 된다.

정리 | 산업·경제연구팀 김진석

박상철 교수는...

Gothenburg University(스웨덴) 및 岡山大學(일본)교수/ 독일 Justus-Liebig-Univ. in Giessen(정치학 석사 및 박사)과 스웨덴 Goeteborgs Universitet(경제학박사)에서 수학하고, 스웨덴 Gothenburg University 경제지리학과 교수, 일본 오카야마대학교, 일본공업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객원교수 역임/ 산업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계에 관한 많은 연구 수행.

전라북도 경기동행지수 작성 의의와 전북경제

1995년 지방자치제 출범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특색에 부합하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전국의 경제를 대상으로 발표되었던 경제지표들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경제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기종합지수의 개발을 시작하였고 전라북도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경기동행지수를 개발하여 2005년 7월부터 매월 7일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요즘 전라북도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을 자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경기란 무엇인가? 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경제는 정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황과 불황이 규칙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번갈아 나타나는 순환적 변동을 한다. 순환적 변동이란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의 실물부분과 화폐의 수요와 공급을 다루는 금융부분, 그리고 수출과 수입을 나타내는 대외부분의 활동을 나타내는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이 동시에 또는 시차를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거시경제변수들의 종합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경기(Business Conditions)이다.

이러한 경기는 끊임없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한다. 이러한 순환은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경기가 상승하면 확장기(Expansion Phase)를 거쳐 정점(Peak)에 도달하게 되고 이어 경제활동이 둔화되어 경기가 하강하여 수축기(Contraction Phase)를 거쳐 저점(Trough)에 도달하며 이 과정이 다음 순환에서도 지속된다. 이러한 경기의 움직임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각 경제주체들은 경기의 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만일 경기의 순환적인 변동이 규칙적으로만 나타나면 경제안정정책의 과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그렇지만 경기순환이 항상 규칙적인 것만은 아니므로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국내외의 경기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해당산업의 경기 동향을 미리 파악하여 자사 제품의 수급전망과 생산 및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동행지수의 작성은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지표 선정과 선정된 지표를 이용한 지수의 개발과 진단을 하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중 개별경제지표의 선정 시 경제부문간의 균형, 포괄범위를 확대 여부, 높은 경기대응력, 안정적인 시차, 그리고 높은 통계적 유의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표를 선정한다. 경기종합지수가 실제의 경기를 제대로 반영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표본의 크기, 통계작성방법, 시계열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계의 질과 유의성이 높은 지표를 선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불규칙변동이 적은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이 용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모의실험을 통해 전북경기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군을 선정하였다. 전라북도의 경우 수집한 41개의 지표 중에서 비농가취업자수, 전력판매량, 산업생산지수, 수출액, 수입액,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어음교환액, 생산자출하지수가 전라북도의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지표로 나타났다. 동행지수 작성의 두 번째 단계는 지수화 하는 과정으로 개별 구성지표의 비경기적 요인 제거, 구성지표의 표준화, 지수화 및 경기순환 판단을 위한 보조지표작성 등의 단계를 거쳐 전라북도 경기동행지수를 개발하고 전라북도 경기에 대한 진단을 하였다.

2005년 5월 중 전라북도 동행지수는 114.0으로 전월대비 0.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생산 확대와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8로 전월보다 0.31 point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전라북도의 경기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경기가 하향하는 추세에 있다.

전북지역의 경기종합지수는 전라북도 경제의 경기국면과 경기전환점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전북지역의 경기동향의 파악과 경기전망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라북도의 적절한 경제정책수립을 통한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동행지수를 위한 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 고용, 생산, 소비, 통화, 무역 등 경제 전체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도민이 느끼는 경기는 소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측면의 지역데이터가 부족하고 농도인 전라북도를 반영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데이터의 부재는 전라북도 경기동행지수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전라북도 경기동행지수가 전라북도의 경제·사회를 설명하는 최초의 지표라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기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선행지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산업경제연구팀 이강진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변화와 과제

한국 성매매역사는 2004년 3월에 제정되어 그해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 성매매방지법(혹은 성매매특별법)은 일반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가지 법을 합하여 지칭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여성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성매매 종사여성의 피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2000년 9월과 2002년 1월 군산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19명의 젊은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성매매역사를 바뀌어 놓은 도화선이 되었다. 즉, 그 동안 성매매여성은 타락하고, 향락 지향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자로 인식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렇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과 흔적은 자발적 참여보다는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성매매에 빠져들었고, 한번 빠져든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굴레로부터 헤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과 성노예화 현실은 그 동안 성매매방지과 성매매 알선업자 처벌강화,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보호를 요구한 여성시민단체의 주장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 주는 한편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아 성매매방지법이 앞당겨 제정될 수 있었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에 맞춰 정부는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정부의 성매매 단속이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그곳에서의 성매매행위가 크게 위축되었고, 그 결과 성매매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집결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나(일명 풍선효과)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일부는 성매매업주와 함께 생계보장을 요구하면서 성 노동자 인정을 요구하며 시위와 집회로 대응하였다.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정부의 집중단속은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 미치는 단란주점이나 가요주점 같은 산업형 성매매업소의 경우 ‘호황’을 누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도 초래하였다.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성매매시장에 종사하는 여성을 더 이상 윤리적으로 타락했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일탈자, 혹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방지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성매매여성은 사회구조적 모순 하에서 성매매시장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작년 12월부터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범 자활사업을 부산(완월동)과 인천(송의동)에서 실시하였고,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사업은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치료, 법률지원, 직업훈련, 그리고 생활비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매여성의 탈업소율이 늘어나면서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거나(성매매활동에 다시 나서고 있는지 확인 불가), 취업, 시설

입소,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정부의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성매매업소와 성매매 여성 규모를 축소시키는데 기여한 반면, 성매매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예를 들면, 2004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6개월간 성매수 혐의로 단속된 남성 9,142명 가운데 8,55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585명을 구속하였다. 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초범이며, 성매매방지법 관련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성매매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단속과 처벌 중심의 정책만으로 성매매근절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성을 구매하다 처음 적발된 남성에 한해 기소유예 대신 재범방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를 2005년 8월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검찰은 초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람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에 약식기소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적은 날을 골라 하루 8시간 동안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에는 성매매피해여성 지원단체나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며, 특히 탈성매매에 성공한 여성도 참여하게 된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매매 공급보다 수요 축소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성매매 종사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은 막대한 자금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여성의 사회복귀 자활사업은 산업형 성매매업소가 성업하고 있는 상황이나 탈성매매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은 우리사회의 구조를 고려할 때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 정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고, 보다 중요한 정책은 성매매 수요를 단절할 수 있는 의식개선 노력이 사회 전역에서 펼쳐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영역의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성매매근절 선언 및 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런 활동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언론, 공공기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며, 성매매 남성의 경우 범죄자로 전락시키기보다는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재범방지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팀장 박재규

존 스쿨(John school)의 유래는 성을 구매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대부분이 자신을 ‘존(John)’이라고 밝힌 데서 비롯하였다.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사업당국을 설득해 성매매 재발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존 스쿨로 명명했다. 존 스쿨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등 10여 개 국가에 달하며,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교육비 500달러(약 50만원)를 남성에게 받아 성매매 여성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

여성 종중원 자격인정 판결의 사회적 의미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인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만을 종중회원으로 자격을 인정해 온 관습과 수십 년 된 판례를 깨고 13명의 대법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회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종래의 관습은 1970년대 이후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인해 법적 확신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에서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딸들의 반란'이라고 명명되어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던 이 사건은 출가여성들의 종원자격 인정 소송으로서, 한 종중이 관리하던 임야 등 부동산 매각 후 재산분배 문제에서 비롯됐다. 성년 남자에게는 1억 5천만원, 미성년 남자에게는 1650만원~5500만원, 출가하지 않은 성년 여성과 며느리에게는 3000만원~3300만원씩을 분배했으나, 출가한 여성들에게는 '종중의 구성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한 푼도 주지 않다가 결혼한 딸들이 격렬히 항의하자 재산분배가 아닌 증여의 형태로 220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에 분노한 출가여성들이 '종중회원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이 났었다. 이에 불복하고 당사자들은 관습상 종중원을 성년 남자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상 남녀 평등권,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상고심과는 달리 여성의 종중회원 자격인정을 놓고 공개변론을 열고, 유림과 여성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대법원장이 포함된 전원재판부에서 다루는 등 판결 이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했다는 부가적인 소식까지 접하면서 살아있는 법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실천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는 그대로 불평등한 제도를 정당화시켜 왔었다. 우리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려는 사회적 노력으로 곳곳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냈다. 사적 영역을 규정하는 가족법 개정, 민법 개정을 통한 호주제 폐지 등이 그렇다. 특히 결혼한 여성을 '출가외인(出嫁外人)'으로 취급하는 전통은 가족법 개정을 통해 소가족 내에서는 차차 소멸되고 있다. 하지만 종중규약 등에서 출가외인에 대한 씨족내의 차별만은 굳건히 존재해 왔었으나, 이번 딸들의 반란사건으로 인해 사라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호주제 폐지에 이어 '여성의 종중자격인정'은 가부장제의 마지막 상징을 철폐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성(姓)을 지키기 때문에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르는 서양의 여성들보다 지위가 높다고 주장하지만, 출가외인으로서 자신의 성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다. 이번 판결은 여성들에게 씨족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찾게 해 주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합리한 연고주의는 지양해야 마땅하지만 이제는 여성들도 사회적 활동공간에서 혈연이라는 '사회자본'을 획득한 셈이다. 실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성공한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사회를 지탱해 왔던 연고주의의 가부장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자본이 적은 여성이 사회의 중심으로 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학연, 지연, 혈연에 기반한 연고주의는 우리사회에서 통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최근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연복지(緣福祉)'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정도로 생산적이고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아마 여성들이 혈연으로 획득한 사회자본은 연고주의의 병폐를 재생산하기보다는 사회를 건강하게 살려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에게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계는 크게 환영하였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시집온 딸(며느리)이나 시집간 딸, 모든 딸들을 어느 집안에서도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무만 부과할 뿐 권리는 전혀 주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전통적인 가족제도 하에서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던 종중의 규약을 사회환경의 변화와 향상된 국민의식에 부합되게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인 판결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구성원간의 민주성과 평등을 회복시키고, 제사 및 명절 풍습 등 가족 내에 존속해 왔던 성차별적 관습들을 건강하고 평등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적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권리 찾기에 시작된 딸들의 반란사건은 소송을 시작해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당사자들은 친오빠로부터 똥물세례를 받을 정도로 집안 남성들의 회유와 협박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까짓 돈 때문에'라는 지탄도 받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1심과 2심에서 패하고, 시간이 갈수록 여성의 당연한 권리 찾기라는 의식이 생김에 따라 힘이 솟았노라고 회상한다.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되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는 이들은 이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아가겠다는 포부를 들려준다. 여성들에게 사회적,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뿐만 아니라 생활과 문화 속에서 당연하고 즐겁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주체가 될 것을 원하는 사회에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

| 사회복지연구원 이윤애

새만금신항만개발과 배후물류단지개발전략 최종보고회

본원은 7월 22일 전북도지사실에서 강현욱 도지사, 본원 한영주 원장 및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신항만개발과 배후물류단지개발전략”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의 주요내용은 첫째, 서해안 광역수도권 및 중부권 신항만으로 새만금 신항만개발의 필요성과 21세기형 통합항만으로 특화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2005년 전국항만물동량을 배정하고 2008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정을 거쳐 2009년에 새만금신항만 건설착수 등 건설시기를 제시하였다. 셋째, 항만분야 SOC 투자예산 배분 20%정도의 항만투자비가 증액되도록 우리나라의 항만정책이 전환되어야 하며, 인천-평택-군산-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 개발축으로서 새만금신항만 개발이 제4차 국토계획수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및 관련학자들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새만금 신항만 개발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북지역 여성지도자 간담회

본원 한영주 원장이 여성계 및 여성정책에 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 20일 도내 여성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원장은 여성계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여성정책연구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여성계지도자는 조덕이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김은경 전북여성단체연합의장, 국영희 전북YWCA협의회회장, 백인숙 전북도의원, 김완자 여성정치발전센터대표 등 8명이다.

제3차 콜로кви움 개최

본원 제3차 콜로кви움이 7월 29일 본원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일본 오카야마대학교 환경디자인 공학과 박상철 교수가 “Swedish Technology Management”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스웨덴의 국가 및 지역혁신체계 및 클러스터 정책에 관한 박 교수의 콜로кви움은 전북지역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산업발전전략과 혁신도시 건설 등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주었다는 평이다.(본문 4p.참조)



제3회 서해안 포럼

본원은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8월 24일 군산 리츠프라자 관광호텔에서 「서해안축 중심의 동북아물류허브 건설」이라는 주제로 제3회 서해안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참여정부의 동북아 물류허브정책을 평가하고 서해안축을 적극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 허브를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서해안축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서해안 5개 시·도연구원이 주최한 「서해안포럼」은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각각 “서해안시대의 전개와 개발방향”, “대 중국 교류를 위한 서해안 새로운 산업지대망 구축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제3회 서해안포럼 프로그램)

◇ 등 록	(14:00-14:30)
◇ 개 회 사(한영주 전북발전연구원장)	(14:30-14:50)
◇ 환 영 사(강현욱 전라북도지사)	
◇ 축 사(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 기조연설 (방희석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4:50-15:10)
◇ 주제발표 ◇ 제1주제 “동북아물류의 여건변화와 서해안축의 역할” (이철식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5:10-16:10)
◇ 제2주제 “참여정부의 동북아 물류허브정책의 평가와 대안” (하현구 인하대학교 교통물류학과 교수)	
◇ 제3주제 “서해안물류철도망구축 방안”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휴 식	(16:10-16:30)
◇ 종합토론 좌 장 이정식 안양대학교 교수 토 론 자 박창호 재능대학교 교수 박형창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안광명 국민경제자문회의 금융·물류실장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 이경재 전북일보 편집국장 이호영 독일함부르크항만청 대표 정일호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장 조중래 명지대학교 교수 채병선 전북대학교 교수	(16:30-18:00)
◇ 환영만찬	(18:00-19:30)

행사장
찾아 오시는 길



열린뉴스 구독신청
☎ (063) 276-2060

열린뉴스는 연구원소식을 전하는 열리지면입니다. 연구원 홈페이지 PDF파일로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전북발전포럼」 원고모집 ■

- 원고성격 : 지역현안 등과 관련된 칼럼, 논문 등
- 제출기한 : 수시모집
- 제출방법 : 이메일(이메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디스크와 함께 제출),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알림

■ 「연구과제」 공모 ■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본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송부해 드리며, 심사를 거쳐 공동연구참여 등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홈페이지 www.jd.re.kr(연구제안)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